

환경의 세계화와 환경부의 역할

94년 가을, 환경처는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했다. 배출부과금제도를 전면개편해서 오염물질 부하량에 비례해서 부과금을 물게 하려고 입법예고했던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안에 대한 부처 협의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개발부처와의 의견대립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지만, 배출부과금제도의 개정작업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웠다는 것이 환경처 실무자들의 한결같은 이야기였다.

당시 환경처와 가장 심하게 의견충돌을 벌였던 부처는 상공자원부였다. 상자부는 배출부과금제만 개정하지 않는다면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안에 동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환경처는 배출부과금제도를 바꾸기 위해서 법을 개정하려고 하는데, 상자부는 그 핵심을 삭제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으니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질리 없었다.

협상이란 원래 주고 받는 것이다. 한 쪽이 아무리 이상적인 내용을 들고 나오더라도 일방적으로 승리하는 일은 좀처럼 발생하지 않는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똑똑한 상자부 관리들은 배출시설의 설치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해줄 것을 협상안으로 들고 나왔다. 상자부로서는 좋은 협상안이었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경



文在完

(매일경제신문 사회부기자, 환경기자클럽 총무)

우에는 아무리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더라도 한 푼의 배출부과금을 내지 않는 현재의 부과금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상자부 관리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어차피 언젠가는 바뀌어야 할 제도라면 수용하되 그 대신 다른 것을 얻자는 전략을 택했다.

그러나 환경처 입장에서는 썩기분 좋은 협상안이 아니었다. 허가제에서 신고제로의 전환은 이 시대 관리들에게 주어진 소명인데, 유독 환경부분만은 예외라는 논리는 궁색했다. 공장안에 들어가 이것 저것 간섭하지 말고, 배출구를 통해서 나가는 오염물질이 정상인지여부만 살펴야 한다는 상자부의 논리는 공무원에 대한 불신으로 큰 보통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어 보였다.

환경보전을 통해 내세우는 환경

처와 국가경쟁력 제고를 앞세운 상자부의 논리는 두 달 이상 충돌한 끝에 11월 중순께 합의점을 찾았다. 서로 조금씩 양보한 선이었다. 배출부과금은 개정하되 시행시기를 대형사업소부터 연차적으로 하기로 하고 중소 사업장은 배출시설 설치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내용을 들은 환경단체들은 환경정책의 후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왜 처음 입법예고한 것처럼 배출부과금제도 개정안을 모든 사업장에 일시에 적용하지 않는냐, 중소사업장은 오염사고가 빈번한데 배출시설 설치를 신고제로 완화해서 어떻게 하겠느냐는 비난들이다.

환경처가 상자부에 완패했다는 것이 많은 환경전문가들의 해석이었다. 더구나 그로부터 채 한 달도 안된 11월 말 상자부는 폐기물예치금제 개정안까지 들고 나왔다. 상자부는 이 제도가 실효성이 없으니, 이제는 생산자가 아닌 소비자로 하여금 폐기물을 회수 처리하게 만들자는 안을 내놓았다. 마치 공병보증금제처럼 소비자가 슈퍼에 가져 가면 보증금을 되돌려 주는 방식으로 바꾸면 지금보다 훨씬 효율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슈퍼이후의 회수체계 구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폐기물 회수 수

거과정에서 기업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이득만 취할 수 있는 여러가지 단점이 많은 개정안임에도 불구하고 이 상자부의 논리는 매력이 있어 보였다. 현재의 폐기물 예치금제는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이득이 돌아가지 않지만, 공병보증금제처럼 바꾼다면 소비자는 폐기물을 회수하려고 노력할 수록 그 이득이 자기에게 되돌아 오기때문이다. 제도의 실효성은 둘째치고, 상자부의 안은 적어도 합리적인 것처럼 보였다.

94년 가을, 환경처는 얻은 것은 없고, 잃은 것만 있는 것 같았다. 그래서 어떤 환경운동단체는 올해의 10대 환경뉴스중 하나로 환경정책의 후퇴를 꼽았다. 어떤 국회의원은 김영삼정부는 일찌감치 환경보전을 포기했다는 말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12월 3일 과천에 찬 바람이 불면서 상황은 완전히 뒤집혀졌다. 위세를 자랑하던 상공자원부는 통상산업부로 개편되면서 정원이 1백10명이나 줄어 들었다. 국장 자리는 3개, 과장 자리는 17개나 없어졌다. 그렇게 프라이드가 대단하던 상자부의 관리들이었지만, 정부조직개편안이 발표되자 삼삼오오 모여 자신들의 앞 날을 걱정하는 모습을 과천 청사 주변에선 쉽게 볼 수 있었다.

반면에 환경처는 환경부로 승격됐다. 대부분의 경제부처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자리 걱정을 해야 했지만, 환경부의 직원들은 처에서 부로 승격된 만큼 그에 걸맞게 수자원, 국립공원 및 에너지 관

불과 한 두달전만 해도 국가경쟁력강화와 기업규제완화만 있고 환경보전은 없는 것 같았지만, 정부조직 개편과정에서 보면 환경의 중요성은 경시되었던 것이 아니었다. 94년 가을의 상황은 협상의 과정이었을 뿐이다. 환경부는 배출부과금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신고제안을 일부 수용했던 것이다.

리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혁기의 과천에서 이처럼 행복한 불평을 털어 놓는 부서는 찾기 힘들었다.

불과 한 두달전만 해도 국가경쟁력강화와 기업규제완화만 있고 환경보전은 없는 것 같았지만, 정부조직 개편과정에서 보면 환경의 중요성은 경시되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그동안 지적되어 오던 환경정책의 후퇴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94년 가을의 상황은 협상의 과정이었을 뿐이다. 환경부는 배출부과금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신고제안을 일부 수용했던 것이다. 일부에서는 모두 다 얻을 수 있었는데 왜 못 얻었느냐는 지적을 하지만 이는 결과론이다.

그러나 아쉬운 협상이었다. 환경부는 기업들로부터 직접 의견을

수렴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얻을 수 있는 것을 놓쳤다. 배출부과금제나 폐기물예치금제는 기업들이 어떻게 받아들일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환경부는 과장된 의견을 들었던 것이다.

개별 기업의 의견은 전경련 등 이익단체를 통해서 상공자원부에 전달되는데, 이익단체나 상공자원부는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존재하기때문에 기업의 어려움을 더욱 과장하기 마련인 것이다.

이는 어떤 협상에서나 마찬가지이다.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부터 의견을 듣고 협상은 그들과 벌려야 한다. 환경부도 이제는 그럴 때가 됐다. 기업들도 환경을 이해하고 있고, 환경경영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만 살아 남을 수 있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다. 그린이라는 단어하나로 매출이 몇 배씩 뛰는 것이 국내의 현실이고, 환경친화적인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국제적인 현실인 것이다.

요즘 유행하는 세계화도 이렇게 추진돼야 한다. 국내 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들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설득시키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어려운 영어를 써가면서 세계적인 추세가 이렇게 저렇다고 일방적으로 주입시키는 행정은 지양되고, 왜 국내도 환경규제가 강화돼야 하는지, 또 그렇게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이득이 되는지를 잘 설득시켜서 기업가로 하여금 저절로 뛰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 환경의 세계화라고 생각한다. ◀